對 外 秘

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

1. BH

■ **판결 선고 전 동향 ⇨ 촉각을 곤두세움**

● BH의 **최대 관심 현안** ⇨ 선고 전 **'항소기각'을 기대**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에 **전망을 문의**

● **법원행정처** ⇨ '**매우 민감**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**우회적·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'을 알리는 한편**, 재판 결과에 관하여서는 **'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,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'을 알림**

- 위와 같은 내용 그대로 **민정 라인을 통하여 보고**됨

■ **판결 선고 후 동향 ⇨ 내부적으로 크게 당황, 외부적으로는 침묵 속에 이완구 청문회 주력**

● 전반적 분위기 ⇨ **크게 당황**하며 앞으로 전개될 정국 상황에 관하여 **불안**해하는 상황

- 특히 **우병우 민정수석** ⇨ 사법부에 대한 **큰 불만을 표시**하면서, 향후 **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**에는 **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**하고 **전원합의체에 회부**해줄 것을 희망

- 이에 대하여 **곽○○ 법무비서관** ⇨ **전원합의체 회부**는 오히려 **판결 선고 지연을 불러올 가능성** 있음을 피력

● **법원행정처** ⇨ 법무비서관을 통하여 **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**함

- **법무비서관** ⇨ 법원행정처 입장을 BH 내부에 **잘 전달하기로** 함, 그리고 향후 **내부 동향을 신속히 알려주기로** 함

● 아직 **"대응" 방향에 관하여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**

- 기본적으로 **'판결 자체에 대한 대응 방법'이 마땅한 것이 없다**는 것이 민정 라인의 **답답한 입장**인 것임

- 단적으로, 유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검찰을 채근할 수도 있겠으나, **무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 변호사를 채근할 수도 없는 노릇**이라는 것

● 게다가 민정 라인은 **오늘 당장 닥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더욱 급한 현안**임

- 일단 법무비서관실로서는 **청문회 전후로 이 사안에 대한 민정수석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**이라고 함

2. 여야 각 당

■ 새누리당 ⇨ 유감

● 김○○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⇨ "**매우 유감**스러운 일…**국정원**은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게 심기일전하고 **재발방지책을 마련**해야 한다"

■ 새정치연합 ⇨ 사필귀정

● **문재인 대표** ⇨ "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확인된 것…남북 대화록 불법유출 악용 등과 함께 종합해 보면 **국가기관의 전 방위적 대선 개입**이 이뤄진 것…**박근혜 대통령**도 이 문제에 대해 **사과**해야 마땅하다"

● 유○○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⇨ "**사필귀정**…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**뜻 깊은 판결**…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**이명박** 전 대통령은 **사과**해야 한다…**박근혜**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**대책**을 제시해야 할 것"

● 새정치연합 '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' ⇨"'죄인은 감옥으로'라는 **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을 확인해 준 판결**…'재판 결과를 보자' 하던 **박 대통령**은 진실을 요구하는 **국민의 질문에 답해야** 한다"

3. 언론 동향1 [선고 직후~다음날 오전]

○ 보수·진보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팩트 전달에 그침
- **다른 현안**이 많고, **280쪽이 넘는 판결문에 대한 분석이 아직**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으로 보임

가. 보수 성향 언론

■ **조선일보 ⇨ 침묵**

- 총 27건의 인터넷 기사 게재 ⇨ 기사 수 자체는 **많은 편**
- 그러나 주요 일간지 중 **유일하게 관련 사설을 내지 않음**

- 조선일보가 실은 3편의 사설 ⇨ '**대통령, 정치권'복지·증세' 논의 타박**할 때인가', '**문 대표, 거친 말** 앞세우면서 '국민통합' 이룰 수 있겠나', '**넥슨·엔씨**, 세계시장 팽개치고 안에서 진흙탕 싸움만 해서야' 등
- 판결 내용에 대한 보도, 여야 정치권의 반응, 법정 안팎 스케치, 원 전 원장과 변호인의 판결에 대한 입장 등 **관련 '팩트'를 건조하게 전달**했을 뿐임

- 유일하게 판결에 대한 **'불편한' 입장을 엿볼 수 있는 기사** ⇨ 5면 하단 **'검찰 안에서도 선거법 적용 논란…최종 판단은 대법 몫'**

- 그간 선거법 위반 적용을 둘러싼 채 전 총장과 황교안 장관의 갈등, 또 검찰 내부 갈등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뒤 **"상고가 확정된 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,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"**고 보도

■ **중앙일보 ⇨ 신중한 가운데 '국정원'으로 비판의 화살을 돌림**

- 총 6개 인터넷 기사 게재
- '1,2심 엇갈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사건'이란 제목의 사설 ⇨ "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**대법원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**한다…**국정원**도 과거 스스로 권우를 훼손해 불신을 자초한 점을 인정하고 **과감한 개혁** 작업을 벌여야 할 것"

■ **동아일보 ⇨좀 더 강하게 국정원 개혁 촉구**

- 총 10개 인터넷 기사 게재
- ‘원세훈 대선개입 유죄, 국정원 어두운 과거와 절연하라’는 제목의 사설 ⇨ “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, 2심의 법리 판단이 달라진 만큼 **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** 한다. 그러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이고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된 **2심 판결에 대해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은 통렬한 반성을 해야** 한다”

나. 진보 성향 언론

■ **한겨레 ⇨ VIP 정면 비판**

- 총 10개 인터넷 기사 게재
- ‘박 대통령의 **정통성에 의문 던진 ‘원세훈 판결’**’이란 제목의 사설 ⇨ “이 사건은 ‘국정원 댓글 사건’이라는 약칭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. **‘국정원 부정선거 사건’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**가 있다...원세훈 전 원장의 범행 동기나 배경, **박근혜 후보 쪽의 인지 여부** 등 더 확인돼야 할 대목이 여럿 남아 있다. 박 대통령도 이런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본다”

■ **경향 ⇨ VIP 정면 비판**

- 총 28개 인터넷 기사 게재
- ‘원세훈 대선개입 유죄, **청와대가 답할 때다**'라는 제목의 사설 ⇨ “**박 대통령이 불법 대선개입의 '수혜자'임이 드러난** 이상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...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을 반대하는 등 **수사를 방해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물러나야** 마땅하다.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을 **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지했는지**등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”

다. 방송·인터넷 언론

■ KBS, MBC, SBS, YTN

-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**1, 2심 판단 근거 소개·분석**하는 기사 위주
  - 최근 무죄를 확정받은 **김용판**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 언급
  - 김용판 사건 축소 의혹, 채동욱 사퇴, 수사팀 항명 파동 등을 다시 소개

■ JTBC

- 기사 게재 <u>총 9개</u> ⇨ **판단 근거 소개·분석**에 초점, **여야의 반응** 소개
  - **그동안의 검찰 수사 과정 상세히 설명**하며 수사 외압과 논란에 대해 조명,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기사

■ TV조선, 채널A

- 분량이 다른 방송매체에 비해 <u>**적은 편**</u> ⇨ 항소심 결과 위주로 전달, 기사 게재 수 <u>**TV조선 5개, 채널A 4개**</u>

■ 뉴시스

- <u>총 26개</u> 기사 게재
- 기사 대부분 **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** 설명, 여야의 주장과 모습 많이 다뤄, 김○○ 부장판사에 대한 과거 판결과 인물 조명

■ 뉴스1

- 판결 결과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 위주의 <u>**중립적**</u>인 보도
  - 여야의 주장과 모습, 참여연대, 새사회연대 등 시민단체의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주장 게재, 선거법 유죄판결에 대한 검찰의 분위기 게재

■ 노컷뉴스, 오마이뉴스

- <u>**노컷뉴스**</u> ⇨ 현 정부의 <u>**정통성**</u>에 대해 언급
  - 야당의 주장(박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해)을 통해 정통성에 대한 시비
- **오마이뉴스 ⇨ 판결 결과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** 위주로 보도

4. 언론 동향② [다음날 오후~2015. 2. 11.현재]

○ 판결에 대한 분석 기사가 보도되고 있음
- 1, 2심 **판결**에 대한 비교·분석, **향후 미칠 영향**에 관한 분석

가. 보수 성향 언론

■ **조선일보 ⇨ 원세훈 '선거 개입' 지시했나…1심 "확인 안 돼" 2심 "궁극적 책임" / '원세훈 선거법 위반', 대선 결과엔 영향 없어**

- "**같은 사실 두고 1심은 엄격하게, 2심은 폭넓게 해석**…1심은 '휩쓸리지 말라'는 지시…'선거운동 말라'고 판단…2심은 '직원들 활동 들키지 않게 조심히 하라'는 취지로 봐"
- "1심서 배제한 트윗 수십만 건…**2심에선 증거로 추가 채택**"
- "지난 2012년 대선 결과에는 **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**"

■ **중앙일보 ⇨ '트위터 계정' 첨부 파일 증거능력 쟁점**

- "대법, **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가능성**도…"

나. 진보 성향 언론

■ **한겨레 ⇨ 원세훈 유죄, 1심에서 배제한 증거가 '결정적 증거'**

- "국정원 트위터팀 김 아무개 이메일 첨부 파일 2개 증거 채택하자 **'선거 개입' 실체 분명해져**"
- "트위터 활동 내역·팀원 계정 목록…당사자 부인에도 '통상문서'로 판단"

■ **경향 ⇨ 대법원이 '유죄' 확정하면 대선 결과 영향 있을까**

- "지난 대선에 대한 **법적 다툼은 가능하지 않으리라**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…**하지만** 시효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3년 1월 초 한 모씨 등이 **제기한 '18대 대선 무효 확인 소송'에는 영향을 미칠 수** 있다. 이들은 "전산운영프로그램인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수개표가 누락됐고, **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"며 소송을 제기**했다."

5. 사법부 내부

■ 소장 법관

- 특히 1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고민하던 법관들은 항소심 판결 내용에 수긍하는 입장이 많음

○ 아래 내용은 최근 개설된 Daum 판사 카페에 익명으로 올라온 게시 글들임

- 결국 실형 3년이군요^^
- **오오!!!**
- 징역 3년 법정구속...**속이 시~원하다!!**
- 실형 나왔네요!
- **간만에 속이 확 풀리는 소식이네요.**
- **꼭 내가 형사피해자이고 가해자한테 실형 선고된 것 같은 기분**예요.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요 : 이건 애교섞인 과장임^^
-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우울한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게 다 잊혀지고 **막 기분이 좋아져요.!**
-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...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...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.... - **이처럼 당연한 말을...**
- **박수를 보냅니다.**
- **김○○ 부장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.**
- 저도 **김○○ 부장님의 글이 생각났어요.**
- (두리번) 선배님~ 이러면 **어느 것이 "튀는 판결" 인가요... 종래 관념으로는 1심인 것 같은데, 윗분들 눈치를 보면 항소심일 것 같기도 하구...** 나는 이 것(판사) 하나 뿐인데... "요즘 젊은 판사들의" 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에 비추어 두 분의 나이를 비교해야 하는지... 아... 어렵다. 휘리릭~
- '튀는 판결'이라는 워딩 자체가 편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. 광우병 파동에 관한 pd수첩 보도관련 무죄판결에 대해서도 튀는 판결이라고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죠. 상급심에서 결론이 유지되었는데도요
- **판사님들 의견이 같네요. 밥조도 같네요**
- 이게 **상고심에서 깨지지 않길 기도**합니다
- 저도 **상고심에서 깨지지 않길 기도**합니다
- *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규범이 헌법적 의미 등에 대한 고려 필요성 : 위 금지규범이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고, 또한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관여에 따른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한 국민의 강력한 규제 의사가 반영되어 입법된 것임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** 공직선거법의 의미

및 그 적용 요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. 그를 위해서는 위 규정이 입법된 목적 및 공직선거법이 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,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위 규정을 해석,적용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헌법규정의 정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. "문제와 정답은 "헌법"이었던 듯 !!

- 아~ **판 사 답 다....**
-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판결과를 전해들은 뒤 "뭐 저런 판사가 다 있나?"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 또 다른 관계자는 "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"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...
  - ㄴ 어제 재경지역 검찰 동기들과 송별회식하면서 들은 얘기와는 좀 다르군요 ㅎㅎ
  - ㄴ 그런 검사도 있겠죠. ㅎㅎㅎㅎ 그렇지만 안그런 검사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
  - ㄴ "고위 관계자"들 얘기죠...검사장 이상이거나 검사장 승진을 바라보는 사람들 마인드는 좀 다른 듯...

■ **코트넷 자유게시판**

● **판결 선고 기사를 전재한 글과 '판사 김○○'의 제목으로 재판장을 두둔하는 글**이 게시되었음

- 각 글에 댓글이 10개 이상 달렸으나, **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음**

6. 향후 대응 방향

■ **판결 결과 분석 필요**

● 항소심 판결과 1심 판결을 **면밀히 검토** ⇨ **신속 처리 추진**

- 기록 접수 전이라도 특히 **법률상 오류 여부** 면밀히 검토 ⇨ **공직선거법 제270조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[3개월]** 최대한 준수하여 신속 처리

◈ **상고심의 쟁점 예상**

■ **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일 듯**

○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너무나도 구체적임

○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(항소심에 적시된 사실관계)를 단순히 '전제 법리' 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

-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"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"는 비판
- 법리 문제를 떠나, 항소심 판결의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구체적임

■ **이른바 '선거 트윗'과 '정치 트윗'의 구별 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음**

◈ 선거무효소송

■ **소 제기 기간 도과 ⇨ 新訴 제기는 불가능**

○ 공직선거법 222조 ⇨ 대선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(후보자·정당),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

■ **다만, 이미 제기된 '제18대 대선무효확인소송' ⇨ 영향 미칠 수 있음**

○ 대법원 2013수18호 사건

○ 원고 측에서 이미 원 전 원장 사건 관련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했음

■ 향후 정무적 대응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

● 계속하여 수세적 입장을 취하는 방안 vs. 수세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면 전환을 꾀하는 방향

-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 ⇨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**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** 있음

-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 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 ⇨ 다만, 역풍 가능성이 극히 우려되므로 **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**할 필요 있음

[끝]